

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주요 Q&A

2015. 7. 22

관 계 기 관 합 동

1. 가계부채 관리협의체 운영 및 주요 논의 내용

-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는 가계부채에 대한 현황과 인식을 공유하고 안정적 관리 방안을 공동 모색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하였음
 - 기재부, 국토부, 금융위, 통계청, 한은, 금감원 등 가계부채 관련 기관의 국장급 이상으로 구성
- 동 협의체는 약 4달여 동안(3.20~7.17) 총 13차례의 회의를 개최(1~2주당 1회 회의)하여,
 - 가계부채 관련 다양한 현안*에 대해 관계기관간 긴밀히 논의하였음
 - * i) 안심전환대출 추가 공급 문제, ii) LTV·DTI 규제합리화 연장 조치
 - iii) 수익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잠정연기 iv) 서민 금융지원방안 등
- 또한,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전반적인 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분석들을 토대로 다양한 대책들을 폭넓게 논의하였으며,
 - 이를 바탕으로 금번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음

2. “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” 의 주요 특징

□ 이번 관계기관 합동 “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”은 가계와 시스템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가계부채 관리 로드맵(Road map)으로

○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가계소득 증대*, 서민·취약층 지원 확대**와 함께 가계“부채” 관리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

* 경제정책방향 발표('14.7.24, '14.12.22, '15.6.25)

**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 발표(6.23)

□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인위적인 대출 억제보다는 사전 위험 관리와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마련

❶ 대출구조를 “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는 방식”으로 개선하여 빚을 늘리는 구조에서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전환

❷ 금융회사 스스로 “상환능력심사 방식을 선진국형으로 개선” 하여 처음부터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이 취급되도록 유도

❸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상호금융 등 “제2금융권 非주택 대출”이 과도하게 증가(풍선효과)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

❹ “금융회사·주택금융공사·가계의 대응력을 제고”하는 한편, “관계기관 합동으로 모니터링”을 강화

□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과도한 금융이용 제약이 발생하거나, 거시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,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

3. 금번 대책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? [기대효과]

	현행(Before)	개선(After)
❶ 분할상환 관행 정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일시상환 · 거치식 위주 · 거치기간 통상 3~5년 · '17년말 분할상환 목표 40%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원칙적으로 분할상환 취급 · 거치기간 1년 이내 단축 유도 · '17년말 분할상환 목표 45%
❷ 상환능력 심사 선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담보 중심의 심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상환능력 중심의 심사
소득확인 내실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신고소득* 광범위하게 인정 ·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추정 · 최저생계비 소득으로 인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증빙소득 원칙 → 신고소득의 경우 심사단계 상향 또는 분할상환 방식 취급 · 최저생계비 소득 불인정
高부담대출 분할상환 유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주택가격, 소득대비 대출금액 한도만 규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주택가격, 소득대비 대출규모가 큰 경우 분할상환 유도
변동금리대출 장래 금리상승 리스크 반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고려하지 않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고려
총체적 상환부담 고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타부채는 이지만 고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타부채의 원금 상환도 고려
❸ 상호금융권 非주택대출 등 관리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탄력적인 한도 상향 가능 · 최저한도 60% 인정 · 예탁금 비과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리스크 감소요인만 상향 허용 · 최저한도 50%로 축소 · 단계적 축소* * ('15)비과세 ('16)5% ('17~)9%
⇒ 종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빚이 늘어나는 구조 · 상환능력 초과 대출 가능 · 제2금융권 非주택대출 증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 ·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 취급 · 제2금융권 非주택대출 억제

4. 상시점검반 구성 및 운영 계획은?

□ 그동안 **가계부채 관리협의체***를 통해 가계부채에 대한 **현황과 인식을 공유**하고 **종합적 관리방안을 마련**한 만큼,

○ 이번 대책 발표를 끝으로 **운영을 종료**할 계획

* '15.3.20~7.17일까지 4달여 동안 총 13차례 회의를 개최

□ 향후에는 발표한 대책들의 **추진 현황을 점검**하고 가계부채에 대한 **모니터링을 대폭 강화**하기 위해

○ 금융위, 기재부, 통계청, 금감원, 주금공, 금융연구원, 금융회사, 신용정보사 등 관련 기관으로 구성된 '**가계부채 상시점검반** (반장 : 금융정책국장)'을 **운영**할 계획

□ 가계부채 상시점검반에서는

○ 정기적(예 : 매월 2회)으로 가계부채 동향, 주요 증감원인, 구조개선 추진 경과 등을 밀착 점검하고,

- 업권별·차주별 대출동향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정교하게 모니터링

○ 상시점검반에서 검토한 주요 내용 및 제도개선 사항은 **경제관계장관회의** 또는 **거시경제금융회의** 등에서 추가 논의할 계획